

2016 경찰 2차 기출문제 해설집

2016.09.03. SAT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기출문제를 완벽 분석!

1. [사회·문화 1단원] 실증적 연구와 개념의 조작적 정의

정답 ①

<보기>에서 제시된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은 가설의 설정, 사교적인 사람의 의미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진 점을 통해 '실증적 연구(양적 연구 방법)'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 ① (X) 직관적 통찰과 상황 정의를 중시하는 사회·문화 탐구 방법은 해석적 연구(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합니다.
- ② (O), ③ (O)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 지표로 만들어 계량화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치화 하는 양적 연구방법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 ④ (X)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변수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2. [사회·문화 3단원]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개념

정답 ④

- ① (O) 계급은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 나뉘지만 계층은 경제적 자원, 정치적 권력,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로 결정됩니다.
- ② (O) 계급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라는 경제적 기준을 두고 두 가지의 계급으로 나뉘며, 동일한 계층 안에서는 강력한 소속감을 갖는 반면, 계층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준을 통해 여러 가지 지위로 나뉘며, 지위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계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소속감도 약하게 나타납니다.
- ③ (O)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두 계급 간에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라는 대립적인 관계가 나타나지만, 다양한 계층 간의 관계는 반드시 적대적이지는 않습니다.
- ④ (X) 계급과 계층은 모두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이를 설명하기 위한 분류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3. [사회·문화 2단원] 일탈 행동에 대한 이론

정답 ③

제시문에서 나타난 일탈 행동에 대한 이론은 갈등적 일탈 이론입니다.

- ㉠ (X) 일탈의 원인을 부정적인 낙인찍기로 보는 것은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을 찍는 주체 자신들이 정한 규칙으로 낙인을 찍기 때문에 일탈을 규정짓는 객관적인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 ㉡ (O) 갈등론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계급 갈등으로 인해 범죄와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배집단은 피지배집단을 일탈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 ㉢ (O) 갈등론은 지배집단이 피지배집단의 일탈행동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를 일탈의 원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지배 계급을 위한 공정한 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한 사회 구조적 해결을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합니다.
- ㉣ (X) 일탈을 접촉과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에 해당합니다.

4. [사회·문화 3단원] 빈곤 문제

정답 ②

- ① (O)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에서 찾는 관점으로는 기능론적 관점과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찾는 갈등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 ② (X) 절대적 빈곤이란 객관적으로 정해진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를 절대적 빈곤 가구로 합니다.

중위 소득의 50% 미만으로 측정하는 빈곤 가구는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합니다.

- ③ (O)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절대적 빈곤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탈피하였으나, 구성원간의 부의 불평등 및 소득 격차로 인한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 됩니다.
- ④ (O) 경제가 발전하면 반드시 평균적 빈곤율은 낮아지지만, 절대적 빈곤 문제는 줄어들 수 있을지언정 여전히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의 결핍과 관련된 것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러한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일부 집단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5. [사회·문화 3단원] 사회적 소수자 문제

정답 ①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책은 장애인이나 여성 집단을 사회적 소수자로 보아 이러한 집단으로 대한 의무 고용 등의 우대조치를 통해 종래부터 받아온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라고도 합니다.

- ① (X)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 고용 제도라는 제도적·구조적 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 ② (O)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과거의 고질적인 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③ (O)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 조치는 오히려 다수 집단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O) 우리나라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로는 여성공천제, 장애인 고용할당제, 공무원의 양성 채용 목표제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6. [사회·문화 2단원] 관료제

정답 ②

② (X) 업무의 표준화와 공정한 업무 처리에 있어 효율적인 관료제는 산업 사회에서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나타난 것으로 규칙과 절차가 엄격하게 준수됩니다. 그러나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목적 전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7. [사회·문화 2단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

정답 ①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로는 주관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객관적 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의 공존을 인정하는 개방적 태도, 사회의 역사·문화·사회적 맥락을 두루 고려해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려는 상대주의적 태도, 현상의 내면에 담긴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려는 성찰적 태도가 있습니다.

- ㉠ (O) (가)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만을 맹신하고 다른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하는 개방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 ㉡ (O) (나)는 충효를 근본으로 보는 우리의 전통 문화의 관점에서만 사회·문화 현상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맥락이나 배경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대주의적 태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 ㉢ (X) (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우리 실버산업 관련 연구기관에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 자신의 주관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객관적 태도가 오히려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X) (라)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두 현상을 탐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찰적 태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사회·문화 2단원] 역할 갈등

정답 ③

역할 갈등이란 한 개인이 여러 지위에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할들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을 의미합니다. 이에 한 개인에게 하나의 지위를 전제로 서로 상반된 여러 가지 역할의 수행이 요구될 때 나타나는 역할 긴장과 한 개인에게 두 가지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여러 가지 지위에 대해 기대되는 역할들이 상충될 때 나타나는 역할 모순이 있습니다.

① (O) 안 모 씨는 회사의 과장이라는 하나의 지위에서 야근을 독촉하는 부장님의 지시에 따른 역할과 부하 직원들이 요구하는 휴식이라는 기대를 충족해야 하는 역할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과장이라는 하나의 지위에서 나오는 두 가지 역할 간에 충돌로, 이는 역할 긴장에 해당합니다.

② (O) 안 모 씨는 가족으로서 아내와 초등학교 딸과 함께 약속한 여름휴가를 가야 하는 역할과 부장님의 부하 직원으로서 주말에도 야근을 해야 하는 역할 사이에서 역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③ (X) 안 모 씨는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아버로서의 역할 사이에 역할 모순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버로서의 역할은 모두 작년에 약속했던 해외여행을 가는 것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④ (O) 안 모 씨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의 정신과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입니다. 관용의 정신이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경허히 받아들이는 것이며, 합리적 의사 결정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의 효율을 갖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의사 결정 능력을 말합니다. 안 모 씨는 휴식과 주말 야근이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선택에 따른 의견 충돌은 관용의 정신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경제 5단원] 환율 결정의 원리

정답 ③

① (원/달러 환율 상승)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하면 미국의 금리가 상승합니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 만큼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상승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자가 더 붙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는 외화의 수요 요인 증가(=외화의 유출 증가)로, 결국 원/달러 환율은 상승합니다.

② (원/달러 환율 상승)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하였다면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상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의 상품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미 수출보다 수입이 증가하여(=외화의 수요 요인 증가=외화의 유출 증가), 결국 원/달러 환율은 상승합니다.

③ (원/달러 환율 하락) 수출은 외화의 공급요인, 수입은 외화의 수요요인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었다면, 이는 외화의 수요 감소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외화의 유출이 더욱 감소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합니다.

④ (원/달러 환율 상승) 우리나라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 재정정책을 펼칠 경우 우리나라 시장의 물가는 상승합니다. 주의할 것은 단지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하였다고 해서 곧 바로 미국 상품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번 지문처럼 미국의 물가까지 비교·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은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수출에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즉, 외화의 공급 감소에 해당하여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10. [경제 4단원] 고용 관련 지표

정답 없음

위 문제는 출제 단계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잘못 설정하여 출제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결국 모두 맞는 것으로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아래는 원래 제시된 가 답안이 ②번 지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출제의도에 맞게 비경제활동 인구를 12,000명이 아닌 4,000 명으로 수정하여 해설하였습니다.

① (O) 경제 활동 참가율 = 경제 활동 인구/생산 가능 인구 × 100입니다. 이때 경제 활동 인구는 생산

2016 경찰 2차 기출문제 해설집

2016.09.03. SAT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기출문제를 완벽 분석!

가능 인구 중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를 제외한 인구를 의미하므로 32,000 명에서 4,000명을 제외한 28,000명이 됩니다. 결국 경제 활동 참가율은 $28,000/32,000 \times 100 = 87.5(\%)$ 가 됩니다.

② (X) 고용률 = 취업자/생산 가능 인구 $\times 100$ 입니다. 따라서 $21,000/32,000 \times 100 = \text{약 } 65.6(\%)$ 가 됩니다.

③ (O) 실업률 = 실업자/경제 활동 인구 $\times 100$ 입니다. 이때 실업자는 경제 활동 인구에서 취업자를 제외한 인구가 되므로 $28,000 - 21,000 = 7,000$ 명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7,000/28,000 \times 100 = 25(\%)$ 가 됩니다.

④ (O)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경제 활동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를 제외한 인구를 의미하므로 32,000 명에서 4,000명을 제외한 28,000명이 됩니다.

11. [경제 4단원] 국내 총생산(GDP)의 의미와 계산

정답 ③

㉠ (X) GDP란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로이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합산한 것이므로, 단지 기존에 존재하던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 것은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O) GDP는 지출측면에서 소비 지출 + 투자 지출 + 정부 지출 + 순수출로 구성됩니다(국민 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 중간재 10억 원의 수출은 순수출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GDP 또한 10억 원 증가합니다.

㉢ (X) 올해 생산된 6천만 원짜리 자동차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로 판매되지 않았어도 올해의 GDP에 반영됩니다.

㉣ (O) GDP는 분배측면에서 임금+이자+지대+이윤으로 구성됩니다(국민 소득 3면 등가의 법칙). 따라서 공무원의 임금이 상승하면 GDP도 증가합니다.

12. [경제 2단원] 우리나라 조세의 유형

정답 ②

① (X) 주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반면 도축세는 소, 돼지 등의 도살에 부과하던 세금으로 과거 지방세였으나 현재는 폐지된 제도입니다.

② (O) 소득세는 누진세, 부가가치세는 역진세의 성격을 갖습니다. 누진세율이란 조세를 부과하는 대상의 금액이 증가하면 세율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로 일반적으로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역진세율이란 조세를 부과하는 대상의 금액이 증가하면 세율이 감소하는 구조로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지문에서도 역진세가 아닌 역진세의 성격을 갖는다고 표현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며 이러한 비례세율은 역진세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③ (X) 지방소득세는 특별시 및 광역시세뿐 아니라 시군세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세는 특별시 및 광역시·도세로 분류됩니다.

④ (X)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13. [경제 4단원] 금융 정책

정답 ④

기준 금리란 매달 국내 물가, 경기 및 금융·외환 시장 상황, 세계 경제의 흐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표하는 통화 정책 운영의 목표 금리를 말합니다. 이때 한국은행이 시중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의 금리도 인상됩니다.

① (O)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금리도 인상되므로 저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률이 오르게

2016 경찰 2차 기출문제 해설집

2016.09.03. SAT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기출문제를 완벽 분석!

됩니다. 따라서 소비보다는 저축이 늘어날 것입니다.

② (O)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저축이 늘어날 것이며, 상대적으로 소비와 투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③ (O) 우리나라의 금리가 인상되면 금융 투자 수익률이 높아져 외화의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은 하락하여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납니다.

④ (X) 우리나라의 금리가 인상되면 투자수익률이 높은 우리나라로의 자본 유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14. [경제 3단원] 시장실패

정답 ③

A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갖춘 사적 재화, B는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자연 독점, C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공유 자원, D는 경합성과 배제성 모두를 결여한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① (O) 가정용 냉장고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진 사적 재화(A)입니다.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며(배제성), 어느 개인이 냉장고를 소비한 만큼 다른 사람의 냉장고 소비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경합성).

② (O) 케이블 방송은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자연 독점(B)에 해당하는 재화입니다. 케이블 방송을 위해서는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지만(배제성), 어느 개인의 케이블 방송 시청이 다른 사람의 케이블 방송 시청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비경합성).

③ (O) C(공유자원)는 경합성이 있는 재화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④ (X)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공공재(D)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재화를 소비하는 무임승차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수익성을 떨어뜨려 사회적으로 필요한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는 시장 실패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필요한 공공재를 직접 생산하기도 합니다.

15. [경제 3단원] 시장 가격의 결정 원리

정답 ③

균형 거래량 및 균형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의 거래량 및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QD=QS$ 가 되는 지점에서의 가격과 거래량을 구하면 됩니다.

이를 차례대로 풀이해보면

$$1) QD = QS$$

$$2) 3200 - 250P = 1600 + 150P$$

$$3) 400P = 1600$$

$$4) P = 4, \text{ 즉 균형 가격}(P)\text{은 } 4\text{가 됩니다.}$$

이 균형 가격($P=4$)을 수요함수든 공급함수든 어느 곳에 대입해도 균형 거래량(Q)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균형 거래량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의 거래량이기 때문입니다.

1) 수요함수에 대입해 보면

$$Q = 3200 - 250 \times 4 = 3200 - 1000 = 2200, \text{ 즉 균형 거래량}(Q)\text{은 } 2200\text{이 됩니다.}$$

2) 한편 공급함수에 대입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Q = 1600 + 150 \times 4 = 1600 + 600 = 2200, \text{ 즉 동일하게 균형 거래량}(Q)\text{은 } 2200\text{이 됩니다.}$$

16. [법과 정치 5단원] 사회법의 의의와 종류

정답 ③

사회법이란 근대 시민법에서 강조되던 사적 가치의 원칙,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리 등의 사법(私法)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公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법은 공법

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합니다.

- ㉠ (X) 사회법은 국민간의 법률 행위를 규율하는 사법의 내용들이 각종 제재가 수반되는 공법들에 편입하는 현상인 사법의 공법화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도 공법도 아닌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합니다.
- ㉡ (O) 사회법의 종류에는 노동법, 사회 보장법, 경제법 등이 있습니다.
- ㉢ (O) 기존의 사법 영역에서는 계약의 자유만을 강조하여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고용 계약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 계약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노동법이 등장하였습니다.
- ㉣ (X) 경제법이란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 영역입니다. 이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경제법은 규제의 완화 보다는 다양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7. [법과 정치 5단원] 사회법의 의의와 종류

정답 ④

- ① (O) 국내법이 단일하고 고유한 입법 기구에 의해 제정되고 행정부의 집행으로 엄격한 강제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국제법은 단일하고 고유한 범세계적인 입법 기구가 없으며, 강제적인 집행 기구가 없어 개별 국가가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② (O)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으며, 그 밖에 판례, 학설, 국제 기구의 결의 등 다양한 법원이 존재합니다.
- ③ (O) 국제법 가운데 조약은 국가 간에 명시적인 합의를 기초로 형성되며, 국제 관습법은 국가 간에 묵시적인 합의를 기초로 형성됩니다.
- ④ (X) 세계인권선언은 국제법으로서의 구속력은 없으며, 단지 선언적인 의미로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들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도 없으며, 이는 단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효력만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8. [법과 정치 5단원] 근로3권 중 단체 행동권

정답 ①

직장폐쇄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나머지 피케팅, 파업, 보이콧 등은 모두 근로자 측이 주체가 되는 쟁의행위입니다.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	파업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집단적 노동 제공 거부 행위
	태업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직업 능력을 저하시키는 행위
	보이콧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 관계있는 자의 상품이나 시설에 대한 구입·사용을 거절하거나 그들과의 근로 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
	피케팅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근로 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협력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
사용자 측의 쟁의 행위	직장 점거	파업을 할 때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
	직장 폐쇄	근로자의 단체 행동에 대하여 사업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이 취업상태에 있지 못하도록 사업장을 봉쇄하는 행위(근로자의 쟁의 행위 이후에만 가능)

19. [법과 정치 2단원]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특징

정답 ②

2016 경찰 2차 기출문제 해설집

2016.09.03. SAT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기출문제를 완벽 분석!

헌법 규정		내용	성격
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의원 내각제적 요소 (권력 융합적 요소)
제53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u>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u>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제적 요소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국정 감사 및 조사 권한	대통령제적 요소 (상호 독립적 구조)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u>해임을 대통령에게</u> 건의할 수 있다.	국회의 해임 건의권	의원 내각제적 요소 (권력 융합적 요소)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u>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u>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과 의원은 모두 별도의 선거로 국민이 선출	대통령제적 요소 (상호 독립적 구조)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제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

- ① (X)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② (O)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
- ③ (X) 제시된 헌법 조문에서 행정권이 행정부와 의회에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 ④ (X) 제시된 헌법 조문에서 국무총리의 구체적인 지위 및 권한은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20. [법과 정치 4단원] 유언과 유류분

정답 ①

제시문에서 甲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2명의 증인이 참여하고, 공증인이 유언의 내용을 직접 필기하는 것입니다. 유언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유언이 유효한 경우와 유언이 무효인 경우로 나누어 상속관계를 정리해나가야 합니다. 유언이 유효하다면 유언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며 다만 법정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의 침해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이 무효라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甲의 법정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丙과 배우자 乙이 됩니다. 재혼한 아내는 유언이 유효한 경우라면 유언대로 유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언이 무효라면 이미 이혼하여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① (O) 유언이 유효하여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丙과 乙의 유류분 산정은 법정 상속분의 1/2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배우자 乙의 법정 상속분은 다른 공동 상속인의 50%를 가산하므로, 결국 甲의 유언이 유효한 경우 甲의 전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乙이 더 많습니다.

2016 경찰 2차 기출문제 해설집

2016.09.03. SAT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기출문제를 완벽 분석!

1. 丙과 乙의 법정 상속분

(1) 丙의 상속분: 丙과 乙은 1 : 1.5(=2 : 3)의 비율로 상속받으므로 결국 丙의 상속분은 $10억 \times \frac{2}{5} = 4억$ 원이 됩니다.

(2) 乙의 상속분: $10억 \times \frac{3}{5} = 6억$ 원이 됩니다.

2. 丙과 乙의 유류분

(1) 丙의 유류분: 법정 상속분(4억 원) $\times \frac{1}{2} = 2억$ 원

(2) 乙의 유류분: 법정 상속분(6억 원) $\times \frac{1}{2} = 3억$ 원

② (X)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법정 상속인이 제시문과 같은 유언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직계존속으로 2순위 상속인인 丁은 1순위 상속인인 丙과 乙이 존재하는 한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보유할 수 없습니다.

③ (X) 甲의 유언이 무효라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丁은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乙과 같은 비율로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④ (X) 甲의 유언이 무효라면 丙은 4억 원을, 乙은 6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